

## 경제문제 인식의 오류가능성에 대한 연구\*

홍 기 현\*\*

### 논문 초록

경제문제는 대부분 많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결과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어렵다. 복합적인 경제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연역법과 귀납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출된 과학적 명제의 경우 문제의 본질적 측면을 밝혀주고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경제학적 명제들을 잘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무지(ignorance)에 의해서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상의 오류가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interest) 때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하거나 복합적 현상의 부분적 측면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경제문제 인식상의 오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무지와 이익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추가하여, 인류의 오랜 공동체 생활로부터 인지과정에 체화되어 있는 본능(instinct)라는 요소가 무지와 이익보다 더 강하게 오류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본능적 요소가 시장경제의 이해를 방해함을 밝히고 있다.

**핵심 주제어:** 경제문제 인식, 과학방법론, 진화론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0, A2

투고 일자: 2021. 12. 14. 심사 및 수정 일자: 2022. 2. 3. 게재 확정 일자: 2022. 2. 28.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 조성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작성되었으며, 초고를 읽고 하이에크에 대해서 논평해주신 이지순 교수님, 박승호 박사 및 경제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하여 의견을 준 참석자들, 그리고 문헌 정리와 교정을 담당해준 서민진 대학원생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익명의 심사자들의 논평을 통해 이 논문의 논지를 분명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 논문의 기본적 생각은 Marglin(1984)의 내용을 가르치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경제적 인식의 오류가 무지(ignorance)와 이익(interest) 때문이라는 언급을 들은 데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후 진화론과 인지과학에 대한 개인적 탐구를 통해서 본능(instinct)이라는 요소가 무지와 이익의 저변에서 작용한다는 생각이 뚜렷해져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hongk@snu.ac.kr

## I. 머리말

시장경제의 생성이 상당한 오랜 역사 과정을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성으로 인해서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 구미제국에서 19세기 구미제국에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분석이 중심적인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서 자리 잡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경제학이란 학문의 역사를 보더라도, 시장가격의 결정에 관한 일반균형적 이론은 1870년대에 개발되어 1950년대에 정밀한 이론이 완성되기까지는 80년이나 걸린 것이었다. 이러한 이론의 발달과 경제학의 전문화를 통해서, 대학교육을 통해서 경제원리가 보급된 이후 몇 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도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경제원리가 과연 맞는 것인지 논란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경제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 공유가 생길 것 같다는 예상도 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임대료 규제나 최저임금제의 부작용과 같이 선진국의 정책 경험을 통해서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당히 동의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가나 언론인 등에서 그 부작용을 애써 무시하는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하면 경제 원리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절실하게 생각된다. 즉, 어느 정도의 경제활동 참여 경험에도 불구하고 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원인을 경제학 및 관련 사회과학적 지식을 종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경제학에서 제시되는 시장경제 원리와 경제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간의 간격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경제문제에 관한 인식에 대해서 시장경제 현상과 관련된 문제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즉 전반적인 사회문제의 영역 속에서 경제문제에 집중하면서, 기업의 조직 문제라든지 정부의 행정력 행사에 의한 경제 문제 개입이나 정치과정에 의한 자원배분의 변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하므로, 기업의 기여에 대한 반감을 주로 논의하는 반기업 정서의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제Ⅱ장에서는 세 가지 배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을 위한 프레임을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는 과학철학과 과학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과 일반적 인식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는 지식사회학(sociology of knowledge)을 통해서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인식상의 방향성을 가져오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셋째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과 진화론이라는 융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인간의 인지작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봄으로써 경제문제를 인식하는데 편향성(bias)이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후의 절들은 위의 배경적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제인식을 저해하는 세 가지 요인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과학방법론에 비추어 경제 원리에 대한 무지(ignorance)에 대한 논의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란 단순히 배우지 않아서 지식이 없다는 것만이 아니라, 연구자를 포함한 어떤 개인도 사회 전체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오스트리아학파적 의미의 원초적 무지(fundamental ignorance)를 포함한다. 이러한 지적 한계에 대해서 연구자의 대응과 일반인의 반응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시각에서 인식의 한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아울러 경제사상의 역사, 또는 경제학의 역사라는 시각에서 비추어 지식축적의 과정과 개인의 학습과정을 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의 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제Ⅳ장에서는 지식사회학적 논의를 기반으로 이해관계(interest)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경제문제는 이익을 좇는 인간행동이므로 행동 패턴도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제적 탐구는 이익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이지만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반드시 경제인식을 왜곡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이익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한다면 자신의 이익을 주장한다고 해서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에 의한 경제인식의 차이가 체계적으로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 간 이해관계 때문에 선호하는 이론체계가 달라지는 사례들을 생각해보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에 주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인지과학 및 진화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 인지과정의 특징, 그리고 그러한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인식의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본능(instinct)이라는 범주로 묶어서 설명하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본능’이란 사회적 생물체로서 인간이 갖는 자연스러운 사고방식과 행동규범의 총괄적으로 지

칭하는 넓은 의미의 인간의 자연적 특성을 의미하며, 생물학적으로 선천적 특성과 사회화 과정에서 획득된 후천적 특성을 구분하여 전자를 본능으로 부르는 좁은 의미와 다름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능’은 학습된 경험을 말하는 지식 영역이나 자신에게 즉각적으로 물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익에 비해서 덜 계산된 사고방식과 행동을 말하며, 지식과 이익 양자보다 더 기저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즉각적으로 표출되지 않으므로 관찰하기가 더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동체 생활에서 벗어나 시장경제로 전환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조직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방식을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므로, A. O. Hirschman (1970)의 이탈(exit)과 목소리(voice)라는 두 가지 조직에 대한 반응 양식을 활용하고자 한다. 즉 공동체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편향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향도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제VI장은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경제문제 인식에서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인 무지(ignorance), 이해관계(interest), 본능(instinct)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경제 원리와 잘못된 인식간의 간격이 생길 수 있음을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본능의 영역에 속하는 요인들이 시장경제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과학, 사회적 인식, 인지과정 분석을 위한 배경적 논의

### 1. 과학철학과 과학방법론: 과학과 비과학(non-science)은 어떻게 다른가?

통상 과학(science)이란 사실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원리에 관한 설명체계라고 정의된다. 주로 과학은 자연과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자연세계 뿐만 아니라 인간 행동과 사회에 관해서도 보편적인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도 과학의 범주에 넣어서 논의할 수 있다. 근대 이후 발달된 과학은 중세의 신학과는 달리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일반적 원리를 찾아낸다는 의미에서 경험과학을 말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귀납법(induction)에 의해서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 근대과학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에 관한 어떤 명제가 귀납법만으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관찰해야 하므로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하고, 귀납적 관찰에 의해서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한 뒤 이 원리를 바탕으로 연역법(deduction)을 써서 관련된 명제들을 추론하는 것이 통상적 과학적 절차가 되므로, 귀납법과 연역법은 상호보완적인 과학방법이 된다.

이러한 과학방법론에 근거하여 실증과학(positive science)에서는 사실과의 부합성과 일반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설명체계를 과학이라고 간주하게 된다. 즉 통상적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거나 한 가지 요건만 갖춘 경우에는 과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뉴스 보도와 같이 사실에 맞는 서술을 하더라도 일반적 원리가 아니면 과학적 설명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반대로 고급 종교와 같이 일반적 원리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과 부합됨을 입증하기 불가능하다면 과학이라고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실증과학에서는 사실부합성<sup>1)</sup>과 설명의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그러한 요건을 갖춘 과학과 그렇지 않은 비과학(non-science)을 구별하게 된다. 실증과학에서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문제(demarcation problem)에서 양자가 뚜렷이 구별되며 그 구별의 기준이 바로 사실부합성과 설명의 일관성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과학적 활동의 결과를 관찰한 결과 과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설명들이 두 가지 요건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사(history of science)의 연구 결과 알려지게 되었다.<sup>2)</sup> 가장 대표적인 업적으로 Thomas Kuhn의 과학혁명에 관한 탐구가 있다. Kuhn은 과학적 설명의 기본적 틀을 이루는 패러다임(paradigm)은 실증적 연구 성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과학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세계관이나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으로서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커다란 과학적 변화의 핵심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즉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특정한 방향으로 문제풀이식

- 
- 1) 어떤 과학적 명제가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그 명제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입증(verification)된다고 할 수 있고, 확률적으로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으면 통계적으로 확인, 즉 확증(confirmation)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록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요인에 의해서 오류(error)는 여전히 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잘 알려진 대로 실증주의자로 분류되는 Karl Popper는 과학적 명제는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을 가진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반증가능하지만 아직 반증되지 않은 과학적 명제의 집합을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2) 과학방법론에 관한 간단한 요약은 홍기현(1991)을 참고할 수 있으며, 신고전학과 방법론 등에 대한 적용은 송현호(1992)를 참고.

(puzzle-solving)으로 탐구한 지식을 과학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경우 이를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라고 하며, 이러한 정상과학이 변화된 현실을 잘 설명하지 못할 때 정상과학의 위기(crisis)가 발생한다고 한다. 나아가 정상과학의 위기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설명체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Kuhn의 과학혁명에 관한 설명은 물리학 분야에서 Einstein의 상대성원리와 같은 자연과학사의 커다란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과학적 활동의 연속성과 실제 과학자들의 실증주의적 접근에 의한 탐구를 설명하는 데는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비판되었다.

이에 따라 Imre Lakatos는 어떤 과학적 연구프로그램(scientific research program)의 기반이 되는 중핵(hard core)은 실증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를 토대로 제시되는 각종 명제들은 보호대(protective belt)에 해당하는 영역으로서 실증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절충적 견해를 제시하게 되었다. 나아가 Lakatos는 보호대 영역에서의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는 적극적 발견법(positive heuristic)으로서 핵심적 체계에 부합하는 명제를 개발하는 것과 반대로 중핵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의 탐구는 억제하는 소극적 발견법(negative heuristic)이 작동한다고 제시한다. 이 경우 과학적 명제는 중핵에 해당되는 가설과 보호대 영역에 속하는 반증가능한(falsifiable) 가설의 복합적 가설이 될 것인데, 만약 검증 과정에서 복합적 가설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중핵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대에 해당되는 보조적 가설을 수정하는 형태로 과학적 탐구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지자를 얻은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을 사멸하지 않고 그 영향력만 줄어드는 형태로 과학은 진전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

Kuhn의 과학혁명론과 Lakatos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등 여러 가지 과학사에 관한 프레임(frame)들이 제시된 이후, 과학철학자와 과학사가들 사이에 과학 발전의 설명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여 종합적으로 Kuhn(1977)은 과학의 선택 기준으로서 사실에 부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정확성(accuracy),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 연구의 범위(scope), 연구의 성과의 발전가능성을 나타내는 풍부성(fruitfulness), 설명의 단순성(simplicity)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게 된다. Kuhn의 다섯 가지 기준에서 앞의 두 가지는 실증과학에서 계속 과학의 기준으로 간주되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과학 활동과 그 전파과정과 관련되는 추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지금까지 논의된 과학철학과 과학방법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과학적 설명 체계와 일반적 사실 인식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과학과 비과학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부합성과 일관성이란 실증과학적 기준으로 과학적 탐구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과학자 공동체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인정되고 있는 설명과 별다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설명과는 그 신뢰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둘째, 과학적 설명체계는 단일한 체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설명체계가 공존할 수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자 내부의 동의의 정도는 단기간에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즉, 과학자 공동체 내부에서도 여러 이론체계가 공존하므로 일반인에게 더욱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한 학문 분야를 넘어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혼란은 더욱 심하게 된다. 그 이유는 분과학문의 전문화 과정에서 특정한 분야의 학문은 특정한 방법론을 갖고 핵심적 가설을 형성하면서 과학적 탐구를 하는 경향이 생기므로, 분과학문 간에 사회를 관찰하는 방식이 차이가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학적 탐구의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학자 공동체 내부에서도 과학적 탐구 결과가 선택되는 데에는 복합적인 이론 틀과 함께 설명체계의 단순성이라는 다중적 요인이 함께 작동하고 있으며, 과학자 공동체 내부에서 합의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일반인에게 이론체계의 특성이 전달될 때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2. 지식사회학적 논의: 지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배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인간의 인식, 나아가 지식 모두는 인간이 처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찍이 영국의 경험주의 사상이

---

3) 결국 “과학”이라고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실증과학에서 말하는 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설명원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이에 가까운 설명이 과학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확률적인 퍼지(fuzzy)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퍼지집합(fuzzy set)이란 어떤 특성에 가까운 요소가 집합의 원소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집합이라고 정의된다는 점에서 원소의 특징이 확정되어야만 집합(set)이 된다는 통상적 집합의 정의와 구별된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약속하여 쓰기로 한 언어로 정의되는 거의 모든 개념은 일종의 퍼지개념이 된다.

Francis Bacon은 올바른 지식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네 가지 우상(idol)을 지적한 바 있다. 즉, ①종족의 우상(집단의 공통된 성질에서 생기는 편견) ②동굴의 우상(개인의 환경과 습관의 영향으로 인한 편견) ③시장의 우상(사람들의 교제, 특히 언어가 사고를 제한하는 것) ④극장의 우상(역사나 종교 등의 신봉에서 생기는 문제) 등 네 가지로 인해서 선입견이 발생하고, 이것이 올바른 인식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Bacon의 지적은 후대에 Karl Mannheim의 지식사회학적 논의의 바탕이 된다. Mannheim은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Ideologie und Utopia*, 1929)』라는 책에서 인간의 사유방식이 그가 처한 존재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연유로 “지식의 존재구속성(Seinsverbundenheit)”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Mannheim은 모든 이념이 계급적 이익을 반영하는 사회적 산물이므로 이데올로기는 결국 허위의식(false consciousness)이라는 맑스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상관주의(relationalism)라는 입장에서 이념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잘 분석함으로써 어떤 이념의 한계와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이데올로기라 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변호하는 특정적 이데올로기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논하는 전체적 이데올로기로 구분되며 기존 질서를 초월하여 미래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유토피아적 인식도 존재하므로, 이념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는 배경적 요인을 함께 탐구함으로써 올바른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사회경제적 이익에서 초월하여 사유할 수 있는 지식인층의 등장으로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 개인적 환경, 문화적 환경, 경제사회적 환경이 작용한다는 지식사회학적 논의를 통해서 환경적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특정한 이념의 선입견을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선입견을 배제하면서 사회적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인지과학적 논의: 인간의 인식은 어떤 특성을 갖는가?

융합적 학문으로 등장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은 뇌과학, 심리학, 의사결정론 등의 연구결과를 합쳐서 인간의 인식을 설명하고 있다. 인지과학에서 핵심적인 연구의 하나인 뇌 과학의 탐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brain)는 크게 보아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다. 즉 육체의 신진대사에 필수적인 영역, 운동능력과 관계되는 영역, 의식적인 사고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의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의식적인 사고를 위한 대뇌 피질 영역이 커진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기억(memory)의 용량이 크며, 필요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함으로써 생존에 유리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식량 확보 등 생존에 필요한 자연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특정한 규범(norm)을 발달시키는 능력이 커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적인 사고 활동에 대해 주로 탐구하는 인지과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기억 용량의 증가로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인지 작용의 발달이 연역적이고 과학적인 탐구활동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2-3%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서 산소를 비롯한 에너지의 20-30%를 사용하므로 쉽게 피로하게 되고, 따라서 가급적 에너지를 적게 쓰고도 생존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진화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더라도, 이익의 계산에 있어서는 완전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적합한 정도의 최소한의 계산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과정에 바탕을 둔 자연스러운 의사결정방식을 Herbert Simon은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라고 부르고 있다.<sup>4)</sup>

의식적인 인지 작용의 과정인 지각(perception)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뇌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즉 지각과정의 최초단계인 주의(attention)에서는 관심이 있는 특정한 영역만 선택적으로 입력이 되고, 입력된 것을 해석하는 데는 특정한 형태로 구조화된 인지틀(frame)을 활용하여 해석하게 되며, 인지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지 자체가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4) 통합과학으로서 인지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한광희 외(2000)를 참조. 의사결정 문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에 대해서는 안서원(2000)을 참고. 또한 싸이먼의 제한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Simon(1978, 1984, 1996) 및 홍기현(2002)의 논의를 참조. 줄고에서는 제한적 합리성이란 개념의 기초가 되는 인지과학적 논의와 그것의 경제학적 함의에 대해서 밝혀 두었다. 즉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주류경제학에서는 합리성이란 프레임을 갖고 이론을 전개하였으므로, 제한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조직이론이나 인간행동론이 잘 흡수되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이준구(2008)의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1980년대 이후 나타난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심리학적 인지과학의 연구를 활용하게 되었으나, 그 성과가 경제학 체계를 상당히 바꾸게 될지는 아직 지켜볼 문제이다.

인간의 인지작용의 기본 특성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투입하여 최대한 계산하지 않고도 생존에 크게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생기는데,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각종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발견된 편향(bias)과 발견법(heuristic)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징적인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전체의 특성을 판단하는 상동적 고정관념(stereotyping)은 잘못된 편향이지만, 쉽게 사물을 판단하여 뇌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인지문제와 관련된 심리적 작용에서 사회문제 인식과 관련하여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측면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인지부조화(cognitive dissonance)의 회피라는 문제이다. 인지부조화란 본인이 생각하는 사실 관계와 실제 나타난 사실이 다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과학적 사고에 따르면 당연히 본인의 인식을 고쳐야 하는 경우이지만 통상적으로 인지부조화가 있는 경우 이를 회피하는 것이 흔히 발견된다. 둘째, 이미 믿고 있는 특정한 이해 내용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실만 수용하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도 대표적으로 에너지 절약적 인지작용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광범위한 인지과정의 하나인 지각(perception)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어떤 일의 원인을 찾는 귀인(attribution)의 편향성 문제이다. 즉 자신에게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이유를 외적인 특성 때문에 생긴다고 외적 귀인(external attribution)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내부적 특성 때문이라고 내적 귀인(internal attribution)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생각하나, 실패에 대해서는 환경 탓을 하는 현상은 이와 관련된다.

이와 같은 인간의 인지작용의 특징은 사회적 인식이나 지식형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인간은 사회적 인식이나 지식 흡수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정도 이상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연스러운 사고를 통해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위해서는 부단하게 학습하고 판단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비해서, 인지부조화의 회피와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인식을 고치는 노력을 회피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인식을 강하게 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셋째, 과학적 탐구의 결과를 전파하는데 있어서도 전달하기 쉬운 일정한 프레임을 만들고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사례와 함께 전달해야 하지, 복잡한 문제를 추상적으로 전달해서는 수용되기 어렵다.

### Ⅲ. 경제이론과 경제인식의 발달: 무지(ignorance)에서 벗어나기

#### 1. 경제학적 탐구의 유용성과 한계

인류의 경제생활은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었고 경제생활의 변화와 함께 경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생각도 진화되어 왔다. 시장 경제에 한정하여 생각해보다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도 소금과 같은 필수품이나 귀족들의 편의품과 사치품이 시장을 통해 거래되었으므로, 시장 가격 결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그렇지만, 시장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아무래도 근대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1776년 발간된 Adam Smith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을 경제학의 출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절에서는 이즈음의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문제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진전을 대략적으로 살펴볼까 한다.

여기의 논의는 자세한 경제학의 역사가 아니므로 정밀한 변화과정이라기 보다는 경제학적 개념의 등장 과정을 살펴보려고 하며, 또한 경제학계의 변화를 서술하는 것도 아니므로 세 가지 유의할 점(*caveat emptor*)을 먼저 전제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Smith에서 시작된 경제학적 탐구를 논의한다고 해도, 그 이전 시기에도 경제학적 사고의 발전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Aristoteles의 윤리학에서는 가격이 효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비례적 정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중세 가톨릭 교부철학(scholasticism)에서도 이러한 생각은 이어졌다. 다만, 근대 이전의 경제학적 탐구는 아무래도 사실에 관한 인과적 설명보다는 특정한 방향으로 사회가 운영되는 것이 정당하다는 원칙하에 규범적(normative) 논의가 많았고, 사실 관계에 대한 탐구도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대 실증과학의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보면 ‘과학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Smith 이후의 경제학 위주로 설명하게 것이다.<sup>5)</sup>

5) 경제학이 분과학문으로 자리잡을 무렵 개발된 많은 개념이 ‘실증적’인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기반에는 ‘규범적’ 요소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초기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 개발된 한계생산력설은 자본소득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는 평가를 주목할 만하다. 즉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이자를 결정한다”라는 J. B. Clark의 명제는 일견 단순화된 실증 명제 같아 보이지만, Clark의 한계생산력설은 그 이후의 한계생산성 분배이론과 두 가지 점에서 다르다. 하나는 초기 자본량이 주어진

둘째는 1890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학이 분과학문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경제학자’ 집단이라는 특정 과학자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경제문제에 관한 사상가이든 경제활동을 하는 경영자이든 현실 경제를 관찰하면서 현실 분석에 적합한 개념이라 설명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문가와 일반인의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의 간격도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대 경제학 교과서에 서 기본적 개념으로 등장하는 기회비용, 수확체감, 비교우위 등의 개념<sup>6)</sup>은 모두 당시 경제활동에 관여하는 지식인층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개념이지 경제사상가나 경제학자가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주요한 경제사상가로 경제학의 역사에서 주목을 받게 된 Smith, Robert Malthus, David Ricardo, John Stuart Mill 모두 전업적(full-time) 경제학자는 아니었고,<sup>7)</sup> 경제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회사상가나 도덕철학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셋째는 경제학이 전문화되면서 과학적 탐구가 정밀해지고 과학적 지식의 축적이 빠르게 진전되었지만, Lakatos의 과학방법론에서 지적되듯이 과학적 지식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축적되는 것이므로 경제문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고르게 설명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경제학계 내부에서도 이론적 탐구 결과에 대해서 동의가 형성되지 않은 내용도 항상 있으며, 나아가 경제학과 다른 분과과학 및 경제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간격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sup>8)</sup> 말하자면, 경제학의 전문화 과정에서 경제이론 자체는 정밀해지고 검증과정

---

것을 가정하므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이자를 결정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질적인 자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량적인 자본의 크기가 이자율과 무관하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Clark의 특수한 한계생산력설은 시장을 통한 분배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견해에서 나온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쟁은 홍기현(2008)을 참조.

- 6)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중세 신학자들이 이자를 부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라지는 이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에서,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은 농업 부분에서 비옥한 토지가 제한됨으로써 생기는 것으로 많은 농업경영자가 관찰한 것이며, 비교우위의 개념은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사한 생각을 하다가 James Mill이 1808년에 발간된 *Commerce Defended*에서 제시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개념들이 어떤 이론체계 속에서 시사점을 가질 때 과학적 의미를 갖게 되므로, 주요 경제사상가나 경제학자들의 업적이 적게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 7) 경제학자(economist)라는 말 자체는 중농주의 사상가들이 경제문제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자신들을 “les Économiste”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으나, 이 당시 중농주의자(physiocrat)를 현대적 의미의 전문적 경제학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영국 고전파 경제학자들도 경제사상가 또는 도덕철학 교수라고 할 수 있으나 경제학의 교육과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경제학자라고 할 수는 없다.

도 더 엄격해지면서 실증과학적 특성은 강화되었으나, 연구의 범위나 전달력이 크게 증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2. 대표적 경제학적 개념의 시대별 논의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경제학계에서 탐구된 주요한 개념이 등장한 것을 시대 순으로 서술하면 수요·공급, 비교우위, 일반균형, 불확실성에 따른 선택 등이 있다.<sup>9)</sup>

### (1) 수요·공급(demand and supply)

가장 먼저 시장 경제 설명에 유용한 것으로 등장한 개념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다. 중세 교부철학에서도 자유로운 경쟁 상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은 정당하다고 생각했으며, 중상주의 시대의 사상가들도 수요가 커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Richard Cantillon<sup>10)</sup>의 저작에서 나타나는 가격 결정에 관한 서술이 있다. Cantillon은 정육업자와 구매자 간의 흥정에 의해서 시장가격이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8) 경제학의 한계에 대해서는 세계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적 위기가 생길 때마다 학계에서 논의가 있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도 경제학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가 많이 일어났다. Quiggin(2010)은 효율성 시장가설 등 5가지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제학을 “좀비경제학”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Rodrik(2015)은 경제학의 이론체계도 특정한 조건에서 성립되는 하나의 모델이라고 다소 우호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9) 여기서 주요 개념의 순서는 경제학적 논의에서 관심을 갖게 된 순서를 말하며, 그 개념이 등장한 순서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Blaug(1985)가 설명하듯이 불확실성에 관한 기대 효용의 개념은 1738년에 발간된 베르누이(Bernoulli)에 의해서 제시된 것이다. 또한 개념의 순서는 경제학 자체의 역사와 다르며, 개인의 경제학적 개념 학습 순서와 관련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홍기현(2011) 참조.

10) Cantillon(1680?-1734)은 아일랜드인이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한 사업가로서 아래 인용된 글은 1730년대에 쓴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Un G n ral*에서 나온 구절이다. 이 책은 사후인 1755년에 프랑스어로 발간되었고, 1964년에 영어로 *On the Nature of Commerce in General*로 번역되었다.

“정육업자는 그가 보고 있는 구매자의 숫자에 따라 가격을 매기려 하며, 구매자는 자신들의 편에서 정육업자가 판매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다고 믿는 바에 따라 값을 내려고 할 것이다. ... (중략)... 수요와 구매자의 숫자에 비교하여 판매를 위해서 제공되는 상품 또는 물품의 수량이 지배적인 시장 가격을 정하거나, 언제나 정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시장가격들이 내재적인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Cantillon, 1730, p. 77)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은 시장경제에서의 거래 행위를 통해서 오랜 역사 동안 잘 알려진 사실이며 시장거래에 참여한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경제학적 탐구가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일반인의 이해도도 높다고 하여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공급설(theory of demand and supply)이 그대로 전달되기 쉽다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경제학의 발달에 있어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수요와 공급 중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줄 것인지 오랜 논란이 있었다는 점이다. 즉 고전학과 이전의 고대 및 중세 경제사상에서는 수요 측 요인인 효용이 가격의 결정 요인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가 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 측 요인인 생산비가 가격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보았다가, 1870년대 한계효용가치론에 기반을 둔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한계효용이 가격 결정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게 되었다. 이것이 1890년대 Alfred Marshall이 기간(period) 개념을 도입하면서, 공급량이 제한된 기간(market period)에서는 수요가, 모든 생산요소의 사용량이 가변적인 장기에서는 공급 측 요인인 생산비가 가격에 주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그 중간 정도인 단기(short period)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작용하는 절충적인 설명 체계가 제시되었다.

둘째, 한 재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주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파악하기 쉬우나, 이것이 다른 재화 시장, 나아가 생산요소에 주는 영향까지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중상주의 시대까지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이 잘 이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재화 시장에서 주는 영향은 체계적으로 고찰되지 않았다. 시장 전체에 대한 고찰은 자본 이동에 관한 Adam Smith의 설명에서 나타난다. 즉 Smith는 가격이 높아져서 수익이 더 발생하는 부분으로 자본이 이동함으

로써 공급이 증가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홍기현(1992)에서 밝혔듯이, Smith조차도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일반균형적 사고의 단초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여러 재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작용하여 가격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방정식의 숫자와 변수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엄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sup>11)</sup>

셋째, 일반적인 수요공급설적 설명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공급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결론에 대해서 동의가 쉽게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1860년대 말 노동조합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두고 벌어진 논쟁을 들 수 있다. 즉 임금기금의 크기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고전학파적 임금기금설(wages fund theory)에서는 노동조합이 임금을 인상시키더라도 고용량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노동조합의 효과가 무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John Stuart Mill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노동조합이 임금총액을 인상시킬 수 있음을 비탄력적 노동 수요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다.<sup>12)</sup>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적 합의가 생길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또 다른 사례로서는 임대료 규제(rent control)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다. 즉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료 규제가 결국 시장 공급을 줄어들게 하여 건물을 노후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경제학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많은 분석 결과와 경험적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재화이므로 가격 결정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재화의 가격은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시장 원리보다는 공동체 원리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 Smith는 모든 부문의 수익률이 동일한 장기 균형 상태에서 생산비가 요소 가격의 합이라는 생산비설을 제시했지만, 임금이 생존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 외에는 추가적인 방정식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가격과 이윤율을 설명하는데 방정식이 부족하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12) William Thornton의 팸플렛에서는 노동시장에 불완전하여 임금이 정해지는 가격 구간에서 가격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서 Mill은 Thornton의 글을 논평하면서 임금기금설을 노동조합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교섭을 수요공급의 틀에서 벗어나는 사례라는 그의 분석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Landreth and Colander (2002), p.182를 참조.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 단순히 무지가 해소되었다고 경제학적 탐구 결과가 잘 수용된다고 할 수 없다. 경제학적 탐구의 전파를 방해하는 요인에는 무지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나 본능 등 다른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학적 지식의 전파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수요·공급 다음으로 시장경제에 관한 인식을 발달시키는 계기는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정립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체계적으로 논의된 것은 잘 알려지지 다시피, 영국 경제사상가 David Ricardo가 1817년에 발간한 책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제7장이다. Ricardo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싼 임금재가 수입되어야 영국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배 모형을 수립한 후, 임금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교역을 통해서 교역에 참가한 국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음을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설명하고 있다. 일찍이 Adam Smith는 분업의 이익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설파하였으나 그의 논거는 기술적으로 생산비가 낮게 되는 절대우위를 확보함으로써 교역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서 기술적 절대우위를 갖지 못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생산에 유리한 품목을 전략적으로 잘 선택함으로써 교역을 통해 상호이익이 됨을 보인 것은 경제학적 사고의 날카로움을 보여준 훌륭한 업적이었다. Ricardo는 어떤 국가 내에서는 상대가격이 투하노동량에 비례하더라도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할 때 가격의 비는 국내적으로 결정되는 투하노동량의 비율과 다를 수 밖에 없게 되고 상대적으로 투하노동량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적게 투입할 수 있는 비교우위 상품에 특화함으로써 교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이 발생한다는 것을 수치 예를 통해서 논증하였다.

Ricardo 자신이 네덜란드 상업학교를 수학한 후 런던 금융시장에서 활동한 바 있듯이, 당시에 국제적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비교우위에 대한 개념과 임금 수준, 나아가 이것이 환율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Ricardo도 이러한 현실 경제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서 국제무역에 관한 제7장을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명 이후 많은 국가들이 국제무역 질서에 참여하면서 비교우위 원리에 입각한 산업화 전략을 택한 것도 이와 같은 현실



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비교우위의 개념은 국제무역의 경험을 가진 경우에는 경제원리를 별도로 배우지 않더라도 이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Ricardo의 설명에서 나타나듯이 비교적 간단한 2국가 2재화 1요소 모형에서 비교우위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국가와 다재화로 확장하거나 생산요소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비교우위가 어떻게 작동할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다음에 논의될 시장경제의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적 분석과 관련된다. 나아가 비교우위의 원리에서 국제무역에서의 재화 간 교환비율의 범위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가격비율은 상대방 수출품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John Stuart Mill이 1848년에 발간된 『정치경제학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호수요(*reciprocal demand*)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야 이해가 되며, 이는 결국 여러 재화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일반균형적 인식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교우위 원리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산업정책에 있어서는 정부개입을 통해서 보호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고전학과 시대에 이미 독일의 Friedrich List는 유치산업(*infant industry*) 보호론을 통해서 산업발달의 단계가 낮은 국가에서는 미래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즉 단기적으로 산업보호를 통해서 생기는 비효율보다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할인한 이익이 더 클 경우 이러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문제는 경제발전론의 주요한 논쟁거리로 지속되고 있다.

나아가 경제학계의 논쟁을 벗어나서 볼 때, 비교우위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중요한 재화이거나 오랫동안 자국에서 생산된 재화는 계속해서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낫다라는 인식이 지속된다. 즉 비교우위의 원리를 논리적으로는 이해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일은 흔히 일어날 수 있다. 이해관계와 본능적 판단이 동시에 작용하여 이러한 정책적 문제를 논의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시장의 다면성에 대한 일반균형적 인식

시장 경제의 복잡성이 진전되고 경제성장과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자 선택의 증대에 따라서, 여러 재화 시장의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1870년대 이후 점차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가 경제이론의 변화를 가져온 과정을 한계혁명(the Marginal Revolution)이라고 하는데, 한계혁명에서 활동한 경제학자들의 주요한 기여는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에 기반을 둔 이론체계를 제시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즉 여러 상품, 나아가 생산요소의 수요와 공급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여러 시장의 움직임을 동시에 관찰하는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의 움직임을 일반균형분석을 통해서 가장 일관되게 분석한 사람은 잘 알려지지 다시피 Leon Walras이다. 그는 1874년에 발간된 『순수경제학개요(*Éléments d'Économique Pure*)』에서 다재화, 다생산요소가 있는 시장에서 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균형이 빠르게 달성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을 때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결정되는 연립방정식 체계를 제시하였다. Walras의 저작 이후 일반균형분석에서는 생산요소간의 대체가 일어나는 경우 한계생산력설의 개발, 미래 재화에 대한 시점 간(intertemporal) 거래가 있는 경우의 가격모형의 개발 등을 통해서 정밀한 가격이론이 개발된다.

이와 같은 Walras식의 일반균형이론은 1950년대에 완성된 후 198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시장경제 설명에 있어서 표준 모형으로 경제학계에서 자리잡게 되는데, 경제학의 전파라는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는 1870년대 당시 수요공급설을 개발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일반균형적 사고를 한 것은 같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설명방식이나 현실 경제에 대한 접근법은 다소 달랐다는 점이다. 영국의 Jevons는 생산이 없고 부존량이 주어진 2인2재 순수교환모형에서 상대가격과 한계효용이 같다는 균형조건을 이용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방정식을 제시하면서 균형가격이 아닐 때 거래가 발생하면 균형점을 찾아가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균형으로 접근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시도한 반면, Walras는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빠르게 생성된다고 보고 균형점에서만 거래가 일어나는 상황만을 분석하였다. 1860년대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미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상황을 일반균형적으로 분석한 Marshall은 여러 시장에서 가격이 균형을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 기간 동안 기술, 선호와 같은 여건이 변화할 수도 있으며

로, 일반균형적 분석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이라는 전제 하에서 한 가지 재화의 시장만을 분석하는 부분균형 분석이 현실적으로 더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일반균형적 탐구가 등장한 것은 경제인식 면에서 큰 진전이지만, 실제 경제에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경제학자 간에도 동의가 일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다만, 소극적으로 보면 부분균형적 접근으로서는 경제 전체를 관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제학계 내에서 상당한 동의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둘째는 경제학계에서 일반균형적 탐구가 개시되면서 전문적인 경제학자와 일반인 간의 인식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다수의 시장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복잡한 현상이므로 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기본적인 사실 외에도, 일반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학적 탐구에서 수학을 사용하고 탄력성과 같이 다른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차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그 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서 경제학적 탐구의 결과를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영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였던 Marshall은 생산요소의 하나인 토지에 대한 보수를 설명하는 지대(rent) 이론에서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즉 Marshall은 개인의 경험에서 인식할 수 있는 지대결정의 방식과 차액지대론(theory of differential rent)에서 말하는 지대결정의 순차적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체 경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토지를 요소로 하여 생산되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 나아가 그 소비재에 대한 가격이 증가해야만 지대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price-determined) 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그런데, 토지를 사용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판매하는 소비재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다른 소비재의 가격이 올라가서 임대료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판매하는 가격을 올리거나, 이것이 안 되면 임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므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price-determining)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전체 경제에 대한 탐구에서 나오는 지대이론과 개인적 부분적 인식의 차이 때문에 지대이론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Marshall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13)</sup>

“지대가 생산비에 들어가지 않는다(Rent does not enter into cost of production)고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많은 사람을 혼동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대가 생산비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은 사악하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미묘한 진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Landreth and Colander, 2002, p. 294에서 재인용)

이 인용문에서 보듯이 경제학적 탐구에 의해서 경제학에서 동의가 일어난 명제조차도, 일반인의 경제 인식과는 괴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불확실성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들

마지막으로 경제학적 탐구 중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 개념은 불확실성과 관련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불확실성 하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의존하는 소비에서 얻는 효용의 수학적 기대치를 기준으로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가설, 발생 확률이 계산되는 위험(risk)과 확률적 분포를 모르는 경우인 좁은 의미의 불확실성(uncertainty)을 구별한 Frank Knight의 기여, 거래당사자의 정보 격차인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장실패에 관한 분석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도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준 개념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기에 정부의 적극적 재정확대를 주장한 John Maynard Keynes의 투자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Keynes는 투자는 미래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 따라서 집단적 심리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통상적인 가치평가는 무지한 다수의 개인들의 집단적 심리의 결과로 확립되는 것으로서, 예상되는 수익에는 실제로 큰 차이가 없는 요소들에 따라서 의견이 갑자기 변동하게 된 결과로 이 가치평가는 급작스럽게 변화하기 쉽게 된다.”(Keynes, 1936, p. 154)

13) Marshall이 Edgeworth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논평으로서, 마셜은 토지의 공급이 제한된 경우 지대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더욱 분명하나, 지대가 상승하면서 개간이 되는 경우 토지 공급이 증가하여 지대가 덜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대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요측면에서 본 지대이론의 특성을 곧바로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Keynes는 이러한 투자이론에 입각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설명했으며 모든 경제주체가 비관적인 전망을 갖는 불황기에는 민간 투자에 의존해서 경기회복을 하는 것은 어려우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되어야 함을 유효 수요이론을 통해서 밝혔다.

Keynes의 이론을 기반으로 경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관찰하는 거시경제학 분야가 개발되었으며, 국민소득통계의 발달과 함께 경제학의 정책적 활용도를 크게 높게 되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 거시경제 분야에서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안정성 내지는 정부정책의 무력성을 주장하는 시카고학과(the Chicago school)의 경제학이 등장하면서, 거시경제학적 명제에 대한 경제학자간의 동의 정도는 미시경제학적 명제에 비해서 크게 적은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sup>14)</sup> 미시경제학 분야에서도 전망이론(prospect theory)에서 제시하듯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심리학적 연구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합리적 선택이란 전제가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 3. 경제학적 탐구가 경제인식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논의한 경제학적 개념의 발달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14) Kearn(1979)이 미국경제학회원에 대해서 행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30여개의 문항 중 미시적/실증적 명제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제가 미숙련노동자의 고용을 줄인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68%가 동의하는 한편, “정부가 완전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한다”는 거시적/규범적 명제에 대해서는 26%만이 동의하고 있다. Takase 등(1998)이 행한 미국, 일본, 호주, 한국 등 태평양 연안 국가 7개국 경제학자들의 의견 조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보이고 있으나, 미국 경제학자들에 비해서 한국과 일본 경제학자들이 전반적으로 정부개입에 대해서 좀 더 지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한데, 이는 일본과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 초기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장정책을 써왔던 결과로 보인다. 그런데, Geie-Stevenson(2022)이 2020년에 Kearn의 조사와 공통된 문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팬데믹, 정부 재정지출 등에 새로운 설문을 포함한 46개의 문항을 가진 후속 의견조사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미시경제학적 실증 명제에 대해서 동의는 비슷한 데 비해서, 거시경제적 및 규범적 명제에 대해서 경제학자간의 의견의 일치도가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해소나 경제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학자와 일반인 간에 인식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는 시장경제원리에 관한 미시적/실증적 명제에 있어서는 일반인과의 인식 차이가 줄어들고 있지 않음도 알 수 있다.

〈Table 1〉 Major Economic Concepts in a Chronological Order

Concepts	Economic Backgrounds	Implication of the Concept	Degree of Communicability
Demand and supply	Expansion of Market transaction	Determination of prices	Relatively easy to understand with experiences of local markets
Comparative advantages	Industrial revolution and international trade	Strategic choice and mutual gains of trade	Possible to understand with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trades
General equilibrium	Expansion of market mechanism in all sectors	Multiplicity of markets and functional distribution by market participation	Only possible to understand with a professional study of a market mechanism
Choice under uncertainty	Increasing market volatility like depression	Macroeconomic explanation of market movements	Decreasing consensus among economists on the macro-issues and difficult to deliver messages across the general public

〈Table 1〉에서 보듯이 경제학적 탐구는 1776년 Adam Smith의 『국부론』 발간 이후 상당히 진전되었고 1870년대 일반균형적 탐구가 개발되고 더욱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엄밀해졌으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학자와 일반인 간의 인식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즉 간단한 부분균형적 수요 공급 원리만을 가지고 복잡한 경제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균형 모형과 불확실성을 도입한 모형에 근거한 이론들이 개발되었으나, 이론의 복잡도 증가는 한편으로 일반인에 대한 전달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여하튼 오랜 연구와 논의의 결과 경제학계 내에서는 시장경제의 장기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실증과학적 기준에서 볼 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경제 원리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명제들이 경제학 교과서에 수록되어 가르쳐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인 Gregory Mankiw의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2005)』에서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sup>15)</sup>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15) 이지순(2021a)도 일반인을 위해서 쓴 책에서 경제의 아홉 가지 기본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아홉 가지 기본 원리는 최근 경제에서 잘 적용이 안 되는 열 번째 원리, 즉 인플레이션과 실업과의 상충관계를 제외하고 Mankiw(2005)의 경제 원리와 본질 상 동일하다.

-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하는 그 무엇이다.
-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 (10)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위에서 제시된 10가지 기본원리 중 (1)~(7)은 미시경제학적 명제이고 나머지 (8)~(10)은 거시경제학적 명제인데, 미시경제학적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가 크고 그 중에서도 (1)~(6)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경제학자들이 많을 것이다. 과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보면 올바른 경제인식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은 경제학자 간에 동의가 일어난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분적인 인식을 가진 모든 경제주체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점이다. 나아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일반인들이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전체 경제적 결과를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과학적 탐구의 결과를 전달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사회경제적 이익과 경제적 탐구: 이해관계(interest)를 넘어서

##### 1. 사회경제적 이해관계가 경제적 탐구에 주는 영향: 곡물법 논쟁의 사례

지식사회학에서 밝혔듯이 사회경제적 이익은 사회 문제에 관한 이념적 논의에 큰 영향을 준다. 사회적 존재와 이념이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해서 모든 이념이 과학적이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며,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준 방식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과학적 탐구 결과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 경제사상사에서 일어난 논쟁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우선 경제학이 전문화되기 전에 일어난 현실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서 곡물법논쟁(corn law controversy)을 사례로 분석하겠다.

곡물법논쟁이 일어난 원인은 1815년경 영국이 프랑스의 Napoleon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즉 전쟁 기간 동안 대륙봉쇄령으로 인해서 대륙의 쌀 곡물수입이 제한되었으나, 전쟁이 끝나면서 곡물수입이 재개되면 곡물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sup>16)</sup> 곡물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 지주들이 곡물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곡물법을 개정하려고 했고,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상가들과 보호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책가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상가의 대표적 인물은 Ricardo였으며, 곡물에 대해서 보호무역을 주장한 사람은 Robert Malthus였다.

Ricardo는 유대인으로서 네덜란드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부친과 함께 채권을 거래하는 일에 종사하여 큰 돈을 벌었고, 현업에서 은퇴한 이후 런던 근교에 농장을 구입하여 생활하였다. 그는 동시대의 지식인들과 교류하면서 경제학적 논의를 이끌어간 중심이 되었다. 그는 경제적 현실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가정을 세우고 정밀한 연역적 추론을 통해서 경제 원리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여, 영국 고전파 경제학의 분석 수준을 크게 높이는데 기여했다. 한편 Malthus는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신학, 철학, 문학, 수학 등을 공부한 신학자이자 사회사상가로서 사회개혁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에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인구론(*Essays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as It Affects the Future Improvement of Society*, 1798)』의 저자로 일찍이 알려진 인물이다.

Ricardo는 1815년에 발간된 『이윤론(*Essays on the Influence of a Low Price of Corn on the Profits of Stock*)』에서 자신의 분배 및 성장이론에 입각하여 곡물수입을 제한하는 것이 이윤 및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그는 이 팜플렛에서 정밀한 표를 활용하여, 비옥한 토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임금제로 쓰이는 쌀 곡물의 수입을 제한하면, 영국 내에서 비옥하지 않은 한계지(marginal land)로 경작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차액지대가 증가함으로써 임금과 이윤의 몫이 줄어드는데,

16) 18세기말 영국의 평균 곡물가격은 4분의1 톤(quarter)당 45-55 실링이었으나, 1800년대에는 82실링으로 급상승하였고 나폴레옹 전쟁의 말기인 1810-13년간에는 106실링으로 폭등하였다. 전쟁이 종료되면서 1815년에 곡물가격이 76실링으로 급락하자, 농업지역의 주민들과 지주들이 곡물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곡물가격이 80실링 이하일 경우 곡물수입을 제한하려고 시도하여 1815년 3월에 의회에서 Tory당으로 중심으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임금은 생존비 수준 이하로 줄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윤이 거의 사라지고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정체상태(stationary state)가 도래할 것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체를 막기 위해서 곡물 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지대에 관한 견해가 옳바르다면, 즉 일반 이윤이 하락하면 지대가 상승하고 이윤이 상승하면 지대가 감소한다면, 그리고 Malthus씨 자신이 인정하고 잘 논증하였듯이 곡물 수입의 효과가 지대를 낮춘다면, 무역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농부이든 제조업자이든 상인이든, 이윤의 증가를 향유할 수 있다.”(Ricardo, 1815, p. 35)

이에 대해서 Malthus는 1814년 봄에 「곡물법의 효과에 대한 고찰(*Observations on the Effects of the Corn Laws*)」이란 이름으로 곡물수입 제한의 장단점을 중립적 입장에서 요약하는 팜플렛을 발간하였다. 그 이후 Malthus는 「외국곡물수입제한정책론의 근거(*The Grounds of an Opinion of the Policy of Restricting the Importation of Foreign Corn*)」를 발간하여 곡물수입의 제한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정부는 곡물의 독자적인 공급을 담보하려는 충분한 이유를 확실히 볼 수 있다. 이것은 항해조례(the Navigation Act)와 같은 성격처럼 확실하고 바람직한 목적일 것이다. 그리고 농부나 지주의 이익이 아니라, 이 목적이 곡물 수입과 관련된 모든 탐구와 논의에 있어서 우리들이 의도한 표면적인 것만 아니라 실질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크게 기대한다.”(Malthus, 1815, pp. 170-71)

나아가 Malthus는 Ricardo의 성장이론을 비판하면서 이윤율만 높으면 투자를 통해서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제에 대해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익률도 발생하지 않고 과잉생산(glut)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위 논의에서 보면 대체로 Ricardo는 제조업 또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자유무역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고, Malthus는 농업 또는 지주의 입장에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그렇지만, 팜플렛과 편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양자 간의 논쟁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경제적 이해관계와 경제학적 탐구는 반드시 직접 대응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첫째, Ricardo의 이론체계와 Malthus의 이론체계는 고전학과 경제학의 토대가

되는 전제와 추론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격의 기반이 되는 속성으로서 노동가치론을 지지한다는 점, 분배론에서 임금·이윤·지대의 3계급 구분을 하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임금론, 지대론, 이윤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7)</sup> Dorfman (1989)이 밝혔듯이, Ricardo와 Malthus의 분석 상 차이는 생산량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을 뿐이다. 즉, Ricardo가 장기적인 요인으로서 인구 규모와 관습적 소비패턴에 의해서 경작의 한계가 주어진다고 생각한 반면, Malthus는 단기적으로 유효수요(effectual demand)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Ricardo가 연역적인 방법을 더 중시한데 비해서, Malthus는 경험적 요인을 더 고려하기 위해서 좀 더 귀납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둘째, 개인의 경력 상 Ricardo는 현실 경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산업화 과정에서 결국 제조업의 비중이 커져야 영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반면, Malthus는 전통적인 중농주의적 사고에 영향을 받아 전통 산업인 농업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식량 확보를 비롯하여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양자 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자 모두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활동을 지지하였으며, 위 인용문의 밑줄친 부분을 보면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설명체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Mannheim의 지식사회학에서 말하듯이, 특정 사회계급의 이익과 초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지식인(intellectual)으로서 전체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식사회학적 탐구를 통해서 개인, 문화, 사회경제적 요인이 이론체계에 준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련성이 과학적 탐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정한 사상체계가 특정한 집단적 이익과 친화적이라고 해서, 실증과학으로서의 판단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과학적 판단은 상당한 정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7) 임금이론으로서는 장기에서는 인구법칙에 기반한 임금생존비설(theory of subsistence wage) 및 단기에서는 임금을 위해서 사용되는 몫이 일정하다는 임금기금설(wages fund doctrine), 수확체감이 작용하여 생산성이 차이나는 만큼 지대가 결정된다는 차액지대설(theory of differential rent), 이윤은 잉여에서 임금과 지대가 공제된 이후 남은 몫이라는 이윤잔여설(residual theory of profit)을 지지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2. 분과 과학의 전문화와 이해관계에 관련된 경제학적 탐구

1890년대 이후 경제학이 전문화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더라도 과학적 탐구 절차를 지키고 이를 학계에서 전문지나 학회 활동을 통해서 논의하는 관행이 수립되었다. 이 때문에 경제문제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나, 과학적 탐구 없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 탐구의 결과와 차원이 다른 것으로 분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행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과 주로 관련되는 국지적 주제(local issue)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이와 구별되는 과학적 탐구의 절차를 중시하는 학문공동체의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를 Mary Furner (1975)는 전문가적 보수주의(professional conservatism) 또는 경력주의(careerism)라고 부른다. 전문가적 보수주의가 경제학적 탐구를 가급적 실증과학적 기준에 맞도록 유도한 것은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그것이 특정한 학파나 이론체계에 유리하도록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적어도 기업가 단체, 노동조합, 소비자 단체와 같은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논의는 전문가 사이에서 사라지고, 이론적 체계와 실증적 자료를 통해서 논의하는 방식이 학계에서 보편된 것은 분명하다.

또한 경제학적 개념에 있어서도 경제적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시된 것이 과학적 탐구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미시경제학에서 제시된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란 개념은 경제 전체의 후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즉 자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어떤 한 사람의 후생이 희생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효율적 배분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후생을 희생하지 않고도 어떤 사람의 후생이 증가하는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은 전체적 이익을 향상시키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완전경쟁 상태에서 시장경제에 의한 자원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명제가 제시됨으로써, 상호이익(mutual benefit)이 증가되는 통상적인 시장거래의 특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편 거시경제학에서도 완전고용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 유효수요의 증가를 통해서 전체 경제의 후생이 증가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게 되었다. Keynes는 소득세나

상속세를 높이더라도 저축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공평한 분배가 소비지출을 늘일 수 있으므로 성장에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완전고용이 지배하기까지는 자본의 증가는 낮은 소비성향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자본 증가를 저해한다는 것, 그리고 완전고용의 조건하에서만 낮은 소비성향이 자본증가를 유리하게 뒀을 살펴보았다. 게다가, 경험적으로 보면 현재 조건에서 기관들이나 투자펀드에 의한 저축은 충분하고도 남으며 소비성향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치들이 자본증가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Keynes, 1936, pp. 372-73)

Keynes의 유효수요이론에 근거하여 불완전고용 상태에서 소비성향이 높은 쪽으로 소득재분배를 하면 전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제안은 후대에 소위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에 관한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즉 적정가동률 이하로 조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 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늘이면 가동률이 향상되고 전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소득주도성장론에서는 불완전고용 상태에서는 기업이 상품에 대해서 생산비 이상 매겨서 이윤의 원천이 되는 마크업(mark-up)을 낮추더라도 실질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가 늘고 가동률이 올라가서 성장률, 나아가 이윤율도 동반 상승하는 결과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다.<sup>18)</sup> 말하자면, 불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임금과 이윤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 상승하여 서로 이익이 되는 일종의 타협의 영역(zone of compromise)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경제적 이익과 이론적 논의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두 가지다. 첫째, 경제학적 탐구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와 상호 이익이 되는 경우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제시함으로써 타협이 잘 일어나는 경

18)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모형을 Dutt (1990)은 과소소비론의 선구자의 이름을 붙여서 Kalecki-Stein 모형이라고 하고 있다. 이 모형은 독과점 중심의 시장 상황에서 고정자본의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비해 경쟁 시장에서 완전고용을 전제한 경우에는 신고전파적 성장모형이 적용되며, 경쟁 시장에서 불완전 고용이 전제된 경우에는 고전파적 성장모형이 적용된다고 비교하고 있다. Dutt의 논의는 국제무역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모형비교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적용 가능성은 국제무역을 포함하여 고려해야 한다. 즉 국내적으로는 독과점적이지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경제의 경우 적용가능성은 복잡해질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진 주상영 (2018)과 김소영 (2019)의 서베이 논문을 참조.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서로 협상하여 양자에게 상호 이익이 되도록 하는 해법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인 양의 합(positive sum)이 있을 때는 시장 경제를 통한 거래가 잘 작동하는 반면, 한 쪽의 이익이 다른 쪽의 손해가 되는 영합게임(zero-sum game)인 경우에는 이익의 충돌 때문에 타협적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둘째, 경제적 이익이 시장 거래를 통해서 잘 조정되는 조건을 명시함으로써, 시장 거래가 좋은가 나쁜가라는 추상적인 판단보다는 거래의 조건을 탐구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이고 시장거래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만약 시장거래가 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상적인 이념보다는 실제적인 조건 탐구를 위해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 논의가 긴요하게 된다. 말하자면, 경제학적 탐구의 결과 경제적 이익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갈등 발생 여부와는 별개로 과학적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이론체계가 제시될 수 있었다.

### 3. 경제적 이익, 제도, 그리고 경제 인식

시장경제의 성립 이후 경제적 이익이 시장 거래를 통해서 조정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경제사상가들이 지적해왔다. 일찍이 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중상주의체제에서 상공업자, 무역업자들이 왕권의 보호 아래서 독점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해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즉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 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사유재산제도, 공정 경쟁, 계약 이행을 위한 법률적 장치와 도덕적 신뢰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면 도메 타쿠오(堂目卓生, 2008)가 말하듯이 결국 약탈적(predatory) 행동이 지배하는 길로 빠져들게 된다. 나아가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에서는 시장경제가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라 하더라도, 정치과정과 입법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지대추구적 행동(rent-seeking behavior)이 나타나고 있음을 많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임금협상이나 가격협상에서 집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정책적 결정과

정을 통해서 집단 이익을 실현시키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익 실현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어 잘못된 인식을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한 부분적 사실만을 수용하려는 확증편향(confirming bias)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이익이 잘못된 인식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인식이나 주장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논리가 없는 경우 사회전체에서 타당한 논리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경제에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충돌은 적절한 조정과정을 거쳐서 타협되기 때문에 일방적 주장만을 지속할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는 점이다. 아울러 비록 갈등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익의 충돌이 되는 문제라는 점이 명확히 부각될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즉 경제적 이익의 충돌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경제인식을 지속적으로 왜곡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다.

## V. 경제생활의 진화와 경제 인식: 본능(instinct)의 영향

### 1. 공동체에서 시장으로의 진화

산업혁명 이전 인류의 경제생활은 공동체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채집과 수렵에 의존하던 원시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 노예제나 중세 봉건제에서도 혈족, 부락 중심의 공동체가 경제생활의 영역이었다. 공동체가 해체된 것은 결국 시장이 발달하면서 분업을 통해 상업적 거래가 활성화되고, 경제생활과 거주지가 분리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에 존재하는 관습과 사회적 구속력에서 벗어나 경제생활의 장소를 공장과 도시로 이동시키는 과정은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으며, 토지 사유화와 같은 제도적 변화도 동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간략히 분석하기 위해서 Hirschman(1970)의 이탈-목소리 방식(exit-voice mechanism)을 적용해 보겠다. Hirschman에 따르면 어떤 조직의 의사 전달 방식은 이탈(exit)과 목소리(voice)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탈(exit)이란 조직

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구성원이 해당 인간관계에서 떠나는 방식이며, 목소리(voice)란 구성원 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조직은 이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여 작동하고 있는데, 이탈과 목소리가 각각 강하게 작동하는지 약하게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유형은 <Table 2>와 같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

<Table 2> Exit-Voice Mechanism

Classification	Strong exit	Weak exit
Strong voice	D. Volunteer Organization	A. Family and Community
Weak voice	C. Expansion of markets and Globalization	B. Absolute Monarchy or Developmental Dictatorship

<Table 2>에서 보듯이 이탈은 약하지만 목소리가 강한 조직은 가족이나 민족이며, 반대로 시장거래방식은 이탈이라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면서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다. 그리고 각각 대각선 방향에 속하는 조직으로서는 동호인 모임과 폭력조직과 같은 것이 위치하게 된다. 그런데, 인류의 경제생활은 공동체(A)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공동체를 해체하는 서구 지역의 종획운동(enclosure movement)이나 저개발국의 정부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발독재(B)를 거쳐서, 시장경제(C)가 정착되고 세계적 차원에서 시장경제가 확립되는 세계화 추세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공동체 중심의 경제생활 때문에 생긴 인류의 행동이나 인식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진화론적 관찰이 필요하다. 진화론적 시각에서 생물, 나아가 인간행동을 탐구한 Dawkins(1976)에 따르면, 유전자의 자연선택(natural selection)과 비슷한 방식으로 문화적 특성도 세대 간에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특성이 전달되는 것을 Dawkins는 문화적 유전자(meme)라고 부른다.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협조를 하려는 성향, 상대방을 속이는 행동을 쉽게 알아내는 능력이 그러한 것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Heath(2001)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 면에서 ①생리학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충동(urge), ②의식적 판단에 따른 계산되어 의도된 행동(intentional action)과 함께 ③의식적 판단 없이 모방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생긴 규범(norm)에 따른 행동이 존재하는데, 세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많은 규범적 행동이 공동체 생활의 결과로 전파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이 경제생활과 그 인식 면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공정성(fairness)에 관한 인식이다. Ridley(1996)에서 밝혔듯이, 원시 시대에서 채집하여 얻은 과일이나 열매는 작은 가족 단위에서 소비하지만, 큰 동물을 사냥하는 것은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오랜 경험이 필요하므로 함께 소비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 때문에 공동체에서 갑자기 얻은 큰 물건에 대해서는 함께 소비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형성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인간의 두뇌작용에 자리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두 사람 간 몫을 나눌 때 한 사람이 그 비율을 먼저 정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여부만 정하는 최종제안게임(final offer game) 또는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에서 역할을 정하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 먼저 비율을 정하는 사람이 50%에 가까운 비율을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Aristoteles의 윤리학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산술적 평균과 결과적 평등을 의미하는 교정적 정의(corrective justice)에 대한 개념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기여나 가치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란 개념과 원천적으로 다른 원리이다. 이에 따라 인간이 시장경제를 통해 비례적 정의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학습했다 하더라도 두뇌의 작용에는 어떤 몫에 대해서는 결과적 평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인식이 항상 남아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둘째,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 관한 인식이다. 즉 공동체 생활의 영역에 필수적으로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극히 꺼려한다는 점이다. 가족 내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혈연공동체, 민족공동체, 국가를 이루는 필수적 요소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록 자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기여한 것만큼 혜택을 주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andel(2009)은 인간생명에 관한 것과 시민권에 관한 것에서 시장경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사람들은 금기시한다고 말한다. 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장기매매가 있고, 후자에 관한 것은 투표권을 사는 행위가 있다. 물론 사회발전 정도나 문화적 차이에 따라 어떤 영역의 것에 대해서 시장경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금기시하는가는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병역의무에 대해서 모병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미국의 경우 평



화 시에는 직업 군인이 당연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경제인식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평가하기 전에, 이 문제를 경제문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엄연한 경제문제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유효한 경우에도 이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은 경제인식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 2. 인지작용과 관련된 경제인식의 왜곡

진화과정을 거쳐 형성된 인간의 인지 작용의 특성과 공동체 생활을 오랫동안 겪은 행동방식을 고려할 때, 시장 경제에서 행동 및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은 경제학적 탐구와 같이 합리적 설명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시장경제의 원리와 인간의 자연스러운 언행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시장경제에서 모든 경제행동은 개인적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도 모두 개인이 책임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인지 작용의 자연스러운 방식은 잘 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나 실패가 나타난 것은 외부 환경의 탓을 하게 된다. 직업 선택, 투자 실패 등에 대해서 제도의 잘못이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해서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금융상품 판매 시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손실의 일부를 상품 제공자나 판매자인 금융기관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으나 구매한 개인의 잘못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둘째, 제한된 자원 하에서 운영되는 경제에서는 어떤 한 선택을 하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항상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있다는 원리가 작동한다. 개인적인 소비 행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강한 예산제약(budget constraint)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의 선택이나 정부 지출의 선택에 있어서는 마치 제약이 없는 것처럼 인식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물론 Kornai(1980)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인식은 시장경제보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더 나타날 것이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목소리(voice)에 의해서 특정 부문에 자원을 더 쓰려는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현실의 시장경제에서도 정부개입이 존재하므로, 경제주체들은

정부를 통하면 마치 예산제약이 상당히 덜 제약적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셋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은 개인의 선택을 합친 결과로 나타나고 가격의 조정을 통해서 빠르게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집단적 심리나 모방행동에 따라서 특정한 방향으로 수요나 공급에 대한 쓸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가격 조정을 통해서 균형을 찾아가기보다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인들은 경제현상도 다수결 원리처럼 다수가 선택하면 단순히 선택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바뀌는 것처럼 작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 3. '본능'과 경제인식의 왜곡

인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한 행동 습성과 자연스러운 인지과정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경제학적 탐구와는 다르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렇다면, 총체적으로 볼 때 행동 습성과 인지적 특성을 아우르는 광범한 의미의 '본능'은 어떻게 인식 면에서 작용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서 흔히 나타나는 경제인식 상의 오류를 살펴보고 이것이 '본능적' 측면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살펴보자. 이지순(2021a)은 경제인식 상 흔히 범하기 쉬운 잘못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세상에는 공짜가 많다.
- (2) 모든 게 남 탓,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
- (3) 평준화하면 모두 잘산다.
- (4) 공동소유가 행복한 나라로 가는 지름길이다.
- (5) 이미 들인 노력을 무시하지 마라.
- (6) 불로소득은 없애야 한다.
- (7)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다.
- (8) 경제를 보는 눈은 근시가 좋다.
- (9) 정부는 전지, 전능, 전선하다.
- (10) 가격규제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

위와 같은 10가지 잘못된 인식은 외견상은 경제 원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생긴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광범위한 ‘본능’과 관련된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동체 중심적 사고 때문에 개인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이나 책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지거나(1, 2, 3, 4번), 공동체를 뛰어넘는 경제적 거래가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7번), 나아가 불확실성에 대한 대가로서 비근로소득에 대한 정당성을 인식하지 못하고(6번)<sup>19)</sup> 과거 지향적이거나 근시안적 판단을 하게 된다. (5번과 8번) 이러한 공동체적 지향이 결국 정부에게 모든 경제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주장(9번과 10번)으로 나타나게 되고, 정부에 대한 요구는 주어진 예산을 누구를 위해서 쓰느라라는 문제에 직결되므로 제로섬 게임이라는 형태로 이익의 충돌을 심화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볼 때, 올바른 경제인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가장 밑바탕에는 본능적 판단과 행동이 작용하며 이러한 작용이 과학적 탐구에 바탕을 둔 경제 원리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정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치적 방식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능’에 의한 경제인식의 왜곡이 경제교육이나 시장경제 활동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시장경제 활동의 경험이 인간의 안전추구 욕구나 소속감을 통한 애정 확보와 같은 기본적 욕구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선택을 요구하고 제한된 자원에서의 선택은 합리적 선택이어야 성공 확률을 높이는데 비해서, 이러한 합리적 선택을 위한 노력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한다. 아울러 시장경제 활동의 결과 생긴 위험 부담과 손실은 시장 경제에 대한 나쁜 경험으로 남게 되므로, 선택과 경쟁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지속되게 된다.

다른 하나는 개인의 성장 과정을 보면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통해서 배운 규범적 윤리나 생활방식이 시장경제에 맞도록 성장하려면 상당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장경제 활동을 위한 지식과 판단력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은 동료관계, 학교

19) 통상적으로 경제학에서 집합적 소득의 개념으로서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으로 이분하여 나눌 때, 비근로소득에는 지대와 이윤 및 이자가 포함된다. 또한 지대는 재화 가격의 상승에 따라 파생되는 요소소득으로서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라고 생각하고, 이윤과 이자는 자본의 생산성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보아 반드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6)번의 명제는 비근로소득을 모두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잘못된 설명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등의 인간관계의 매개체가 잘 발달된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시장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적 조직이 발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에 적응하는 것이 힘이 들고 나쁜 경험으로 남게 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절대왕정, 식민지 경영, 개발 독재 등 경제외적 강제가 작용한 역사적 경험이 존재하므로, 집단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역사적 기억으로 전수되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이를 Hirschman의 이탈-목소리 도식을 설명하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즉 <Table 2>에 나타난 조직 유형을 적용해보면 개인의 성장과정과 사회의 전환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개인의 성장에서는 가족(A)-동료관계(D)-시장(C)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적응과정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공동체의 전환 과정은 공동체(A)-폭력적 조직(B)-시장(C)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므로, 특정 사회에서 개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에 잘 적응될지 알 수 없다.<sup>20)</sup> 시장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잘 유지되고 개인들이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적 조직들이 없다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능에 의한 경제인식의 왜곡은 Friedrich Hayek의 마지막 저서인 『치명적 자만 (The Fatal Conceit, 1988)』에서 나타난 시장경제의 진화과정에 관한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Hayek는 이 책에서 시장경제질서는 교역을 통해서 나타난 인간의 선택과 더불어 도덕, 제도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진화한 확장된 질서(extended order)로서, 공동체 생활에서 생긴 본능적 판단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와 크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경제는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문화적으로 이를 전수하는 진화과정의 결과 생기는 것이다.<sup>21)</sup>

20) 이런 추세에서 경제생활에서 이탈과 목소리가 동시에 강한 동호인 모임 방식은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신뢰(trust)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데는 각종 동호인 모임과 같은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Putnam(1994)의 주장은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적용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은 다소 강압적인 방식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인간관계를 학습하는 기회는 동호인 모임에서 주어진다.

21) Hayek의 이러한 주장은 그의 논문(Hayek, 1945)에서 나타난 시장의 역할에 관한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일반 원리를 탐구한 결과 얻어지는 과학적 지식(scientific knowledge)은 어느 정도의 노력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도 전달되지만, 특정한 장소, 시간,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국지적 지식(local knowledge)은 그 지식을 가진 사람 간에 체험을 함께 할 때 전수될

수 만년의 인류의 역사를 생각하면 시장경제는 아직 공동체 생활의 원리에 비해서 그 역사가 짧고, 시장경제 자체도 부단히 진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에 대한 신념이 본능에 의한 판단을 충분히 압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시장경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도 어렵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sup>22)</sup> 특히 경제발전에 따라서 점차 많은 재화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화 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재화라고 인식되는 사적 재화(private goods)를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것은 본능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재가 아닌 재화의 경우에도 기본 생활에 관한 것을 정부가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생필품이나 의약품, 고등교육 등에 대해서 경제발전의 정도와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정부 개입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구성원들의 공동체 생활에 대한 의존성 정도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시장경제의 역사와 경험이 몇 백 년 되었고, 상당한 물질적 성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제도와 구성원의 인식이 이에 맞추어 모두 변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제인식 상의 오류에 대해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 VI. 맺음말: 본능, 무지, 이익의 상호작용과 그 해결방안

잘못된 경제인식을 가져오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무지(ignorance)를 생각하게 된다. 실제 경제학적 탐구 과정도 경제현상의 복잡성을 가져오는 기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경제학의 역사를 통해서 정리하면, 수요·공급, 비교우위, 일반균형, 불확실성의 순서로 개념적인 발달을 통해서 시장경제의 특성이 잘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시장경제에 참여한 경험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수요·공급이 잘 이해되고, 국제무역에 중

---

수 있으며 암묵적이고 특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는 국지적 지식의 특성을 갖는 개인의 선호는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2) 이지순(2021b)은 인류의 생활에서 수십만 년 간의 원시상태에서는 공동체 생활이 지속되었으며, 그 이후 만년 간의 노예경제에서는 주인이 지배하는 명령 경제였으므로, 개인이 자율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한 것은 서양의 경우에도 몇 백 년에 지나지 않으며 세계적으로는 수십 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한 사람들에게는 비교우위라는 개념까지는 이해될 수 있는데, 내용의 복잡도 (complexity) 를 기준으로 할 때 일반균형과 불확실성은 잘 이해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시장경제 경험을 통해서 일반균형과 불확실성의 효과까지 인식이 되기 어려운 것은 결국 개인이 사회전체를 관찰할 수 없다는 원초적 무지 (fundamental ignorance) 때문이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원초적 무지는 과학적 탐구에서 의해서 어느 정도 극복되고 경제학자들의 노력은 여기에 집중되어 왔다. 그렇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편 해를 추구하는 뇌의 작용에 의해서 이해하는데 힘이 든다. 이 때문에 경제적 명제를 전달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사례를 포함하여 전달하려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적 분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거부감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경제적 분석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

다음으로 경제사회적 이익도 경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한 주장을 한다는 것과 잘못된 인식을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할 때, 경제적 이익 때문에 특정한 자료나 부분적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확증편향 (confirmation bias) 이 작용하겠지만 과연 인식 자체를 잘못하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이익이 인식에 주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논문에서는 자료 확보의 편리성 때문에 경제적 이익에 관한 논의를 경제학계의 논쟁을 위주로 설명했지만, 일반인이나 정책적 논쟁에서도 경제적 이익에 관한 특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즉,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주장들은 부분적 사실이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따른 판단에 비해서 높게 평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한다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념은 모두 허위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장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타당하겠으나,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들이 모두 과학적이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들도 과학적 가설의 하나로서 검증될 수 있고, 일반적인 이론 체계에 포함되어 분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오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규범적 행동으로 문화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과는 직접 관련 없이 행동 패턴이 정해지기도 한다. 개인

의 노력에 의해서 큰 재산을 획득한 경우 이를 공동체가 함께 형성한 것으로 인식하여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기여에 따라 배분한다는 시장 경제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타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 행동과 인지작용, 나아가 경제생활의 진화과정을 통해 나타난 특성이 어떻게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문제이다. 인류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공동체 생활을 해왔고 그에 맞는 방향으로 뇌의 인지작용이 발달해온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기억 전달과 속임수를 가리는데 적합하게 발달한 대뇌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큰 용량으로 진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논리적 추론에 아주 적합하게 진화한 것은 아니다.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합리적 판단은 경제학적 탐구에서 말하는 합리성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인간의 안전과 소속 욕구 등 공동체에서 발달한 특성은 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선택의 결과를 모두 개인이 책임지는 방식의 계산된 선택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에 맞는 행동과 인식은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성장과정에서 점차 학습해야 하는 것인데, 좋은 경험을 가져다주는 적절한 학습기회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적 조직이 없이 시장에 던져진 상태로 선택의 고통을 감당하게 해서는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러한 진화적 특성으로 인해서 무지를 벗어나 학습을 하는 것이나 경제학적 탐구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힘들게 하고, 경제적 이익과 안전욕구를 구별하는 판단력을 갖는 것도 힘들게 한다. 말하자면, 진화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본능적 요소들은 무지와 이익의 근저에서 지속적으로 올바른 경제인식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무지, 이익, 본능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과학적 탐구를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과학 자체도 현실의 복잡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을 쫓아가면서 결국 현실을 모두 담아낼 수 없는 제논의 화살(Zenon's arrow)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학문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인정되고 동의를 얻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하여 이론적 설명을 전달 가능한 방식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Table 3〉 The Effects of Ignorance, Interest, and Instinct on the Cognition of Economic Problems

Item	Related Theories	Implications	Communication between economists and the general public	Direction to resolve the gap
Ignorance	Philosophy and Methodology of Science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to overcome individual's fundamental ignorance of not understanding the full picture of a society	Delivering a simple underlying principle of the complex economy	Repetitive practice of simple cases in a partial equilibrium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mplex nature of an economy due to the limitation of cognition	
Interest	Sociology of knowledge	The perpetual impact of social positions on the cognition of economic issues, but true understanding beyond the interests by intellectuals	Judgement of universal benefit over local interests	Presenting the case of positive sum and differentiating it from the case of zero-sum
			Confirmation bias based on individual interests	
Instinct	Cognitive Science and theory of evolution	Not making efforts to understand the complex nature of a society and adhering to the norms given by a long period of communal experiences	Increasing difficulty of delivering the complex theory including uncertainty	Providing practices of rational choices in organizations like school and volunteer groups
			Misjudgement of rational behaviors in a market setting	

다음으로 이익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경제문제에 대한 주장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과연 전체 사회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 없다면 이익의 충돌은 어떻게 갈등을 줄이면서 조정될 수 있는지 열린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능에 의해서 인식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의 특성상 왜 그러한 인식이 나오게 되는지 융합적 설명체계를 개발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설명을 시도해야 하며, 단순히 설명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므로 환경이 다른 국가나 조직에 대해서 체험활동이나 간접경험을 늘여서 본능의 영향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 ■ 참 고 문 헌

1. 김소영, “소득 주도 성장 논란과 향후 방향,” 『경제논집』, 제58권 제1호, 2019, pp. 27-38.  
(Translated in English) Kim, Soyoung, “Discussion on the Income-led Growth and Future Prospects,” *Korean Economic Journal*, Vol. 58, No. 1, 2019, pp. 27-38.
2. 김종순, “Herbert A. Simon의 의사결정이론,” 오석홍 외 (2000), 『조직학의 주요이론』, 제14장, 법문사, 2000.  
(Translated in English) Kim, Jongsoon, “Decision-Making Theory of Herbert A. Simon,” in Sukhong Oh et al. *Major Theories of Organization*, Bupmoon Publishig Co. 2000.
3. 송현호, 『경제학방법론』, 비봉출판사, 1992.  
(Translated in English) Song, Hyunho, *Methodology of Economics*, Beebong Publishing Co., 1992.
4. 안서원, 『의사결정의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0.  
(Translated in English) Ahn, Seowon, *Psychology of Decision-Making*, Sigma Press, 2000.
5. 이준구, “행태경제학의 등장과 경제학의 미래,” 『경제논집』, 제47권 제1호, 2008, pp. 1-82.  
(Translated in English) Lee, Joonkoo, “The Rise of Behavioral Economics and the Future of Economics,” *Korean Economic Journal*, Vol. 47, No. 1, 2008, pp. 1-82.
6. 이지순, 『너와 나의 경제학』, 김영사, 2021a.  
(Translated in English) Lee, Jisoon, *Economics of You and I*, Kimyoung Publishing Co., 2021a.
7. ———, 『인간해방의 경제학』, 문우사, 2021b.  
(Translated in English) Lee, Jisoon, *Economics of Human Emancipation*, Moonwoo Publish Co., 2021a.
8. 주상영,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은 여전히 유효한가?” 『사회경제평론』, 제31권 제3호, 2018, pp. 1-27.  
(Translated in English) Joo, Sangyong, “Is the Paradigm of Income-led Growth Still Valid?” *Review of Social and Economics Studies*, Vol. 31, No. 3, 2018, pp. 1-27.
9. 한광희 외, 『인지과학: 마음, 언어, 기계』, 학지사, 2000.  
(Translated in English) Han, Kwanghee et al., *Cognitive Science: Mind, Language and Machine*, Hakji Publishing Co., 2000.
10. 홍기현, “미국의 경제학교육과 연구,” 『경제논집』, 제28권 제3호, 1989, pp. 393-421.  
(Translated in English) Hong, Keehyun, “Economics 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Korean Economic Journal*, Vol. 28, No. 3, 1989, pp. 393-421.
11. ———, “현대자본논쟁의 과학방법론적 평가,” 『경제논집』, 제30권 제1호, 1991, pp. 33-59.  
(Translated in English) Hong, Keehyun, “The Methodological Assessment of Modern Capital Controversy,” *Korean Economic Journal*, Vol. 30, No. 1, 1991, pp. 33-59.
12. ———, “고전학과 가치론의 재검토,” 『경제논집』, 제31권 제3호, 1992, pp. 207-225.  
(Translated in English) Hong, Keehyun, “The Re-examination of Classical Theories of

- Value," *Korean Economic Journal*, Vol. 31, No. 3, 1992, pp.207-225.
13. \_\_\_\_\_, "제한적 합리성과 의사결정," 『경제논집』, 제41권 제1호, 2002, pp.29-51.  
(Translated in English) Hong, Keehyun, "Bounded Rationality and Decision Making," *Korean Economic Journal*, Vol. 41, No. 1, 2002, pp.29-51.
14. \_\_\_\_\_, "한국에서의 경제학 발전과 과제," 김균 · 이현창,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Translated in English) Hong, Keehyun, "Development and Tasks of Economics in Korea," in Kim, Kyun and Heonchang Lee ed, *The Development of Economics in Korea and Korea University*, Korea University Press, 2005.
15. \_\_\_\_\_, "기업조직의 유형적 특성에 대한 제도론적 설명," 『경제논집』, 제48권 제4호, 2009, pp.425-442.  
(Translated in English) Hong, Keehyun, "The Institutional Explanation of Charaters of Types of Firm Organization," *Korean Economic Journal*, Vol. 48, No. 4, 2009, pp.425-442.
16. \_\_\_\_\_, "사회인식과 한국 기업의 경쟁력," 김광익 외, 『한국 기업과 사회의 경쟁력』,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pp.181-217.  
(Translated in English) Hong, Keehyun, "Social Cognition and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Firms," in Kim, Kwang-Uck et al,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Firms and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1, pp.181-217.
17. \_\_\_\_\_, "이윤 및 이자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사적 연구," 『경제논집』, 제57권 제1호, 2018, pp.3-38.  
(Translated in English) Hong, Keehyun, "A Historical Survey on Theories of the Justification of Profit and Interest," *Korean Economic Journal*, Vol. 57, No. 1, 2018, pp.3-38.
18. 堂目卓生, 『Adam Smith』, 中公新書, 2008, 우경봉 역, 『지금 애덤 스미스를 다시 읽는다』, 도서출판 동아시아, 2010.  
(Translated in English) Dome, Takuo, *Adam Smith*, Chuogoron-Shinsha Inc., 2010.
19. Blaug, Mark,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4<sup>th</sup>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5.
20. Cantillon, R., *Essai sur la Nature du Commerce un General*, 1730, English translation reprinted in Newman, P. C., A. D. Gayer and Milton H. S., *Source Readings in Economic Thought*, Norton & Company Inc., New York, 1954, pp.69-85.
21. Dawkins, R., *The Selfish Gen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76.
22. Dorfman, R., "Thomas Robert Malthus and David Ricardo,"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 No. 3, 1989, pp.153-164.
23. Dutt, A. K., *Growth, Distribution, and Uneven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0.
24. Furner, M., *Advocacy and Objectivity: A Crisis in the Professionalization of American Social Sciences*, 1865-1905, University of Kentucky Press, Lexington, 1975.
25. Frey, B. S. et al., "Consensus and Dissension among Economists: An Empirical Inquiry,"

- American Economic Review*, December, 1984, pp.986-994.
26. Geide-Stevenson, Doris and Alvaro La Para Perez, "Consensus among Economists 2020-A Sharpening of the Picture,"  
<https://www.aeaweb.org/conference/2022/preliminary/paper/HBhGyFD7>, 2022.
  27. Hayek, F.,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35, No. 4, reprinted in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Chicago University Press, Chicago, 1945, pp.77-91.
  28. ———,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in W. Bartley(ed.), *The Collected Works of Friedrich Hayek*, Vol. 1, Chicago University Press, 1988, 신중섭 역, 『치명적 자만』, 자유기업센터, 1997.
  29. Heath, J., *Communicative Action and Rational Choice*, MIT Press, Cambridge, 2001.
  30. Hicks, J., *A Theory of Economic Histor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69.
  31. Hirschman, A. O., *Exit, Voice and Loyalty*,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0.
  32. Kalecki, M., "Political Aspects of Full Employment," 1943, in Hunt, E. K. and Jesse G. S. (eds.), *A Critique of Economic Theory*, Penguin Books Inc., 1972, pp.420-430.
  33. Kearn, J. R. et al., "A Confusion of Economis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9, pp.28-37.
  34.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st ed., Harcourt, Brace and Company, New York, 1936.
  35. Kornai, J., *Economics of Shortage*, North Holland Press, Amsterdam, 1980.
  36. Kuhn, T.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2n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37. ———, "Objectivity, Value Judgement, and Theory Choice," in T. S. Kuhn(ed.), *The Essential Tension*, 1977, pp.319-391.
  38. Landreth, H. and D. C. Colander, *History of Economic Thought*, 4th ed.,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2002.
  39. Malthus, R., "Observations on the Effects of the Corn Laws", in *The Pamphlets of Thomas Robert Malthus*, August M. Kelley Publishers, New York, 1814, pp.93-131.
  40. ———, "The Grounds of An Opinion on the Policy of Restricting the Importation of Foreign Corn," in *The Pamphlets of Thomas Robert Malthus*, August M. Kelley Publishers, New York, 1815, pp.135-173.
  41. Mankiw, G. N., *Principles of Economics*, 4th ed., 2005, 김경환 · 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7.
  42. Mannheim, K., *Ideologie und Utopia*, 1929, English Translation by, *Idology and Utopia*, Routledge, London, 1936.
  43. Marglin, S. A., *Growth, Distribution and Price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4.
  44. Mill, James, "Commerce Defended", 1808, in D. Winch(ed.), *James Mill: Selected Writing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45. Mill, John Stuart,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with Some of their Applications to Social*

- Philosophy*, Routledge and Kegan Paul, 1848.
46. Putnam, R.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94.
  47. Quiggin, J., *Zombie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정수지 역,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 21세기 북스, 2012.
  48. Ricardo, D., "An Essay on the Influence of a Low Price of Corn on the Profits of Stock," 1815, in P. Sraffa(e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4, Cambridge University Press.
  49. \_\_\_\_\_,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7, in P. Sraffa(e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50. Ridley, M., *The Origins of Virtue*, 1996, 신좌섭 역, 『이타적 유전자』, 사이언스북스, 2011.
  51. Rodrik, D., *Economics Rules*, 2015, 이강국 역, 『그래도 경제학이다』, 생각의 힘, 2016.
  52. Sandel, M. J.,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2009,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53. Simon, H. A., "Rationality as Process and Product of Though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8, 1978, pp.1-16, reprinted in Simon(1982).
  54. \_\_\_\_\_, "On the Behavioral and Rational Foundations of Economic Dynamic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 5, 1984, pp.35-55.
  55. \_\_\_\_\_,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 3rd ed., 1996, 이용필 역, 『인공과학의 이해』, 신유, 1999.
  56. Smith, A.,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 in Modern Library edition, ed. by E. Cannan, 1937, 김수행 역, 동아출판사, 1992.
  57. Walras, L., *Elements of Pure Economics*, 1874, translated by W. Jaffe, George Allen and Unwin, 1954.

## The Study of Fallacies in Cognition of Economic Problems\*

Keehyun Hong\*\*

### Abstract

The economic problems in a market economy are so complex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how they work. Economic theories which have developed since Adam Smith published *The Wealth of Nations* in 1776 help to understand correctly economic situations, but do not guarantee fully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This paper traces down three factors which bring about fallacies in the general cognition of economic problems, namely ignorance, interest, and instinct. Especially, this paper argues that instincts which have been formed by communal living of mankind for a long time affect much on human judgement on economic problems.

**Key Words:** cognition of economic problems, methodology of science, evolutionary theory

**JEL Classification:** B0, A2

---

*Received:* Dec. 14, 2021. *Revised:* Feb. 3, 2022. *Accepted:* Feb. 28, 2022.

\* The author is very grateful for financial support of SNU, comments by Professor Emeritus Jisoon Lee, Dr. Seung-Ho Park and research support by Mijin Seo, Ph.D student.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nak-gu, Kwanak-ro, 1, Seoul 08826, Korea, Phone: +82-2-880-6379, e-mail: hongk@snu.ac.kr